

轉換期の 勞動組合과 勞動運動의 方向

- 특히 87年 勞動爭議 以後를 中心으로 -

金 潤 煥*

< 目 次 >

- I. 轉換期 勞動運動의 意味
- II. 勞動組合再編과 勞動運動 樣相
- III. 勞動運動과 勞動組合에 대한 挑戰과 對應
- IV. 勞動運動의 評價와 展望

I . 轉換期 勞動運動의 意味

우리 나라 노동운동은 跳躍先行期(개항 - 1950년대)에 임금노동자의 형성과 노동조합의 결성을 배경으로하여 반침략, 반봉건이란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싹났고, 8.15광복후에는 좌우투쟁의 혼란속에서 반공주의적 성격을 띠었으며 50년대에는 정치와 밀착되어 노동운동의 正統性을 지키지 못하였다. 60년대이후의 공업화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노동문제의 발생을 배경으로 노동운동이 본격화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저조한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이유는첫째, 8.15광복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긍정적인미도 있었지만 자기 힘 아닌 남의 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토분단, 외세개입, 일제잔존세력 온존이란 부정적 의미를 갖고와 權威主義體制를 형성케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둘째, 국토분단에 따른 안보태세의 강화와 국가안보우선이란 이름아래 노동운동이 제약되었다. 셋째, 보다 직접으로는 수출 건설을 목표로하는 대외의존적인 수출주도의 노동집약적 공업화가 임금억제, 노동운동규제, 타율적 노사관계를 결과하였다. 넷째, 공업화에따라 量·質的으로 커가는 노동세력을 단결된 힘으로 조직하지 못하여 노동운동이 저조하였다.

이리하여 6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공업화 특히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기에 노동문제는 본격화되고 심화되었지만 노동조합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다른편으로 현장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쟁의를 일으켰음으로 노동운동계는 미약한 제도권의 노동조합운동과 올바른을 지키려는 재야권의 勞動者運動으로 분열되었다.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던 80년대에 재야운동세력은 권위주의 체제와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장지상주의적 경제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國家主義의 모순을 시정하여 올바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향하는 國民主義指向의인 방향에서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세력이 6. 29 민주화 선언후 한국사회의 전환기에 새로이 조직된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조직화되면서 밑으로부터 노동운동을 개혁해 갔고 다른편으로 기존 노조조직이 점차 現場勞動者의 기반위에서 정화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이 권위주의 체제하의 노동집약적공업화과정에서 억압되어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운동으로 분열되었던 노동운동이 민주화체제하의 산업구조고도화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상화되어가는 노동운동이 과도기의 노동운동인 것이다. 과도기 노동운동의 전환점이 된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87년의 노동쟁의인 것이다.

Ⅱ . 勞 動 組 合 再 編 과 勞 動 運 動 樣 相

87년의 6월 민주화항쟁이후 노동운동의 양상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종전에는 노조설립이 극히 어려웠던 大企業이나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신규노조가 결성되었다. 뿐만아니라 일부 영세업종에서는 개별사업장 단위의 소규모 노조대신 일정지역의 동종업종이 뭉친 보다 큰 노조를 결성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지역내의 유사업종끼리 또는 업종에 관계없이 여러가지 형태의 연대를 맺고 있다. 이것은 힘의 결속으로서 기존의 제도권노동조합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새로운 단계 노동운동의 主體性을 키워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지역노동조합의 설립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87년 11월 28일 개정 공포된 노동조합법이 노조설립제한규정을 삭제해 노조설립 조건을 자유화함에 따라 우선 범외노조로 활동해 오던 淸溪被服勞組가 87년 12월 1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낸후 88년 5월 2일야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지역노조인 서울지역인쇄 노조와 서울제화공노조도 이미 88년 4월 29일과 30일에 각각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지방에서는 釜山革工勞動組合이 88年 1月 14日 성남제화노동조합이 88년 4월 18일 각각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협의체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87년 12월 14일 이미 마산, 창원 노동조합 총연합회가 결성되었고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서울에서는 88년 6월 29일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창립했는데 이날 동협의회는 그동안 권력과 勞動貴族에 의해 왜곡되고 타락한 노동조합운동의 방향을 바로 잡고 노동대중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위해 매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에서도 88년 3월의 한독금속공업 당시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공동으로 대처했던 22개노조가 인천지역노조협의회결성을 준비하

었다. 화이트칼라노조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협의제도 결성되기 시작했는데 87년 12월 2일에 결성된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와 全國大學職員勞動組合協議會, 현대사회연구소, 한국산업연구원등 13개 연구기관 노조들이 88년 3월 12일에 발족시킨 연구전문기관 노조협의회가 바로 그것이다. 88년 1월 19일에는 일요신문 노조와 일부출판사노조들이 민주출판언론노조협의회를 결성했고 4월 6일에는 전국 15개 언론사노조들이 전국언론노조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재벌기업들에서도 노조협의회가 결성되었는데 87년 8월 3일 현대계열그룹사 파업 당시 현대그룹노조협의회가 결성된 바 있다. 그리고 대우 그룹 15개사노조가 87년 12개사노조로 구성되었던것에 추가하여 대우그룹노조협의회를 재발족시켰다.

(3) 이상과 같이 지역별노조와 노조협의회가 결성되는 가운데서 기존노조연맹체의 내부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전국금융노련으로부터 87년 11월 27일 제 2 금융권 82개사가 탈퇴하여 사무금융노련을 결성하고 이때 남아있던 보험회사 노조들이 탈퇴하여 88년 9월 3일 전국보험노련을 결성하였다. 또한 전국자동차노련에서도 87년 12월 9일 전국택시노련이라는 같은 이름의 두개의 노련이 생기기도 하였다.

요컨대 노동조합조직의 양상변화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산업별·직종별 지역노조결성, 지역별·업종별 그룹계열사간노조협의체구성, 산업별노조연맹의 분화등인데 이것은 87년 노동쟁의에서 어용노조와 민주노조간의 조직분규를 통하여 자주적이고 단결된 강력한 노조조직이 필요함을 통감한것과 노조결성의 제한조건을 풀게한 勞動組合法改定에서 온 것이라 한다. 새로 결성된 대부분의 신규노조들이 조직기반이 약하여 연대 강화를 위한 각종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의 한국노총 및 산별노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으나 일단 기존의 조직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참여하여 內部改革을 시도하려는 입장과 전적으로 부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87년 노동쟁의가 勞動運動史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면 과거시위나 폭력사태보다 대화와 적법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88년 노동쟁의의 새로운 양상은 차원높은 노동운동으로의 質的發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양상으로는

① 87년과는 달리 노조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노동쟁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7, 8월 투쟁은 급격한 정세 변화속에서 자연발생적이고 우발적인 투쟁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충분한 준비없이 싸움에 돌입하였다. 반면 올 賃鬪는 사전에 명확한 중심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내용과 성과가 보다 알차다는것이 노동관계자들의 일반적 평가¹⁾」라는 것이다. 87년 노동쟁의에 있어서 준비가 없었던 기업은 처음에 많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점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조에 반격을 가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어용화 시켰다고 한다. 따라

1) 십 명화, 「위장취업자가 본 노동 운동 현장」, 한국경제사회 연구소 엔터프라이즈, 1988년 7월호 603번

서 1천6백여개의 신규노조가 생기고도 민주노조로 정착된 것은 극히 소수라고 한다. 그러나 올봄에 생긴 노조들은 민주노조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87년 노동쟁의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다가 또한 작년말부터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상담소나 연구소등이 급속히 늘어나 신규노조결성에 적극 개입, 노동자들의 의식적, 조직적 준비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87년 노동쟁의 후 기존노조세력과 민주노력이 확연히 구분되어 신규노조가 노선확장을 명확히하여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② 노동자들의 운동활동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87년의 노동쟁의는 폭발적이었다고 하나 쟁의의 범위는 단위사업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고립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노조의 힘이 늘고 경험이 쌓이게 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연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다. 「공동야유회, 공동체육대회, 위원장들간의 정기모임, 노조간부들간의 경험 교류, 조합원들간의 교류」의 폭이 매우 다양해진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산별연맹이나 지역에 군림하고 있는 노총산하 시·도노조협의회안에서 명백한 하나의 독자세력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²⁾ 그리고 서울 인천등지에 노조협의체가 구성되고 일부 공단내의 노조가 연대를 강화하여 시위 파업등 여러 경우에 서로 지원투쟁을 하고 있다한다.

③ 노조가 점차 준법적,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87년 노동쟁의의 경우는 쟁의가 우발적, 폭발적으로 일어난데다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생각기간이 30일이나 되어 거의 전부의 쟁의가 불법파업이었다. 그러나 88년에는 노동쟁의를 조직적으로 일으키고자 하였고 쟁의조정법상의 생각기간도 10일로단축되어 대부분의 노조가 爭議發生申告를 내고 그 동안은 준법투쟁을 벌이면서 10일 뒤에 파업에 돌입하는 차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력을 갖춘 노조는 이러한 적법절차에 따른 노동쟁의를 일으키지만 정비가 덜되고 힘이 약한 신규노조의 경우는 신고후 10일간의 생각기간에 회사측의 분열, 회유, 탄압등의 역공세 앞에서 전열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불법파업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준법투쟁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예컨대 리본달기, 작업복겨꾸로입기, 온갖구호를 적은 벽보를 작업복에 부착시켜 입고 일하기, 식사배식구에 한곳으로만 줄서기, 동일한 시간에 집단으로 화장실가기, 일시에 다수가 조퇴원이나 휴가원내기등으로서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자들의 폭력적투쟁이나 사업장의 점거농성, 사업주연금등이 있고 사용자측의 敎社隊暴力, 노조활동방해, 노조간부납치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많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④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조직으로서 민주화되어가면서 자주성을 확보할 싸이 트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제휴를 하더라도 노조의 고유한 목적과 독자적지위는 지키면서

2) 심 명화, 전개논문, 604 번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 지난해 노사분규의 특색의 하나는 의식화된 운동권 세력들과 재야 세력권이 분규에 깊숙히 간여, 문제의 심각성을 자아냈다는 것이다. 재야 운동권 근로자나 노조가 자신들의 문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비해 발언권이 약하므로 스스로 문제해결의 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노사분규에 개입하는 명분을 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운동권, 재야세력들은 이러한 본래의 목적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함에 따라 오히려 분규가 과격한 양상으로 치달기도 했다. 3)

재야세력과 연계된 노동쟁의의 대표적인 예가 88년 봄에 있었던 근로자 이석규씨의 죽음 까지 몰고갔던 대우조선노동쟁의이다. 그리고 88년 2월 7일 오후 2시 재야·운동권은 한 달이상 농성중인 맥스테크사 근로자들과 합세하여 위장폐업철회등 각종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등을 들고 마포에서 종로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던 경우이다. 이에는 국민운동노동자위원회가맹단체, 노동운동협의회, 민통련, 여성단체연합회, 서대협(서울지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소속 일부학생등이 참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4월이후의 본격적인 교섭시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고 앞으로도 연대화된 노동조직들이 무턱대고 부정과 사리사욕에 찌든 구정 치인이나, 극단적인 소아병적인 사고와 행동에 휘말리지 않을것으로 해야려진다. 요컨대 앞으로 노조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발전하면서 원숙한 노사교섭의 경험과 지혜를 쌓고 노동운동정상화와 노사관계전전화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것이 외부세력개입을 막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케 하는 지름길이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勞 動 運 動 과 勞 動 組 合 에 대 한 도 전 과 對 應

새로와지기위한 노동운동계의 양상변화에 대해 노동행정당국, 한국노총, 사용자들은 장기적인 전망위에서 대응 방향을 세우지못하고 단기적으로 당면 문제를 놓고 소극적이고도 방어적인 도전과 대응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동운동은 노동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이 교호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커가고 변화한다.

87년노동쟁의를 보더라도 노동운동은 8-9월의 公權力介入을 통해 대량 구속사태를 거친 후 위축되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위축된 원인은 일차적으로 공권력개입에 의한 핵심노조간부의 구속, 제도언론을 통한 이데올로기공세등에도 있지만 10월이후의 시기에는 노동자대중의 관심이 대통령선거에 집중되어 있었던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정부도 노골적인 개입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여 그리고 기업은 불확실한 선거결과에 대한 전망으로 해서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을 자제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울산현대계열사에서 11월말경

3) 「분규만이 마지막 카드는 아니다」 한국경제사회 연구소 엔터프라이즈, 1988년 3월호,

부터 결성된 자유수호구국직장평화봉사단과 12월 3일에서 5일에 걸친 좌경용공분쇄결의대회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기업주측은 한층 강화된 탄압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공세적인 것에서 신규노조를 지키고 이미 약속된 것을 이행케 하는 방향의 방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한다.⁴⁾

88년봄의 노동운동양상도 공세적인 것과 방어적인 것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행정당국은 87년노동쟁의 이후 노사자치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노동쟁의의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때에는 가차없이 공권력을 개입시켰다. 88년 7월 26일에 일어난 철도기관사 총파업의 경우도 단체행동권이 허용되지 않은 公務員 身分으로 파업을 일으켰다하여 1천 2백명을 검거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노동부는 가능한한 현재의 단일 노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총 및 산별노련의 내부개혁을 통해 이 체제안에서 노동계의 변화요구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라 한다. 제 2의 노총이나 산별노련의 지나친 분화는 앞으로 社會安定的 觀念이 될 노사관계의 안정은 물론 노동운동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기본입장에 따라 노조설립신고서를 심사할 때 단위노조의 경우 산별노련 가입인준증을 확인하도록 업무지침을 세워 신규노조나 노련이 한국노총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총이나 대부분의 산별연맹은 이같은 노동부의 입장을 이용해 자신의 체제를 수호하는데만 급급할 뿐 능동적인 改革意志나 수용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규노조나 노동부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한다.⁵⁾

재벌기업들의 노조에 대한 대응양상은 경영관이나 주력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특색이 있다. 현대그룹의 경우 25개 계열사중 자동차, 중공업, 엔진, 정공, 미포조선, 강관, 종합목재, 알미늄, 중전기, 금강개발등 10개 업체가 울산공업단지에 집중되어 한 사업장의 농성이 바로 이웃 사업장으로 파급되고 각 사업장노동자들간의 연대활동이 손쉬워 다른 재벌기업보다 노동쟁의가 과열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수원, 구미, 창원등에, 대우의 경우 인천, 광주, 포항등에 몇몇 공장이 몰려있긴하나 나머지 회사들이 분산되어 현대와는 사정이 다르다. 건설업으로부터 출발한 현대는 권위주의적이고, 責任經營를 시켜 노조를 기피해온 삼성은 치밀한 경영을 하였는데 이것이 노조에 대한 대응을 각기 다르게 하고 있다. 대우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키웠는데 대우옥포조선의 경우처럼 1조원의 부채로 매출액의 20%를 이자지급으로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고 인수기업에서 영입된 충성심이 약

4) 「87년 하반기 노동운동 동향」 이성과 현실사, 노동자의 벗 제 2호 1988년 3월호, 20면

5) 1988년 5월 14일자 동아일보

한 중간관리층이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노조의 대응자세를 좌우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요인도 있지만 사주의 勞使關係觀이라 한다. 전회장때부터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삼성그룹의 의지는 쟁의가 일어난 타기업의 대우에 못지 않은 대우개선을 하면서 노조와 같은 기능을 보장한다는 사규와 함께 노조대신 평사원 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시켜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삼성은 근로자동향과약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치밀한 조직을 통한 관리능력이 뛰어났다는 평이다. 현대그룹도 노조가 그다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신념에서 노조결성과정에서부터 분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현대는 25계열사중 21개사에 노조결성이 이루어져 있다. 현대는 거칠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비하여 격화된 노동쟁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는 튼튼한 노조를 만들어 놓고 協商을 벌인다는 수법을 쓰는데 광주의 대우 캐리어 공장에서 88년 4월 노조가 설립될 때도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설립을 도왔다는 것이다. 무역업으로 출발한 대우는 경변 줄과식으로 노동쟁의에 대응해 가고 있다 한다.

88년에 가장 많은 분규에 휩쓸렸던 대우 그룹은 「분규관련대우의 입장」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급조된 노조가 정통성의 도전을 받게되자 이의 돌파구마련을 위해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했고, 노조의 선명성부각이라는 부담과 주도권 다툼등 노조간 대립을 내포했고, 협상노력없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쟁의를 벌였으며, 민주노조방식의 불합리성이 표출되어 나온 대표성문제로 인해 협상장구선정이 곤란해져 분규가 장기화되었다고 한다. 이 유인물은 특히 88년 4월 대우조선에서 노사간의 합의안을 노조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대표협의회, 조합위원회등에 붙여 부결됐던 일은 노조의 대표성 결여로 인해 노사 모두가 불필요하게 힘을 낭비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과거에 노조결성이나 정상활동을 저해해왔던 사용자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성숙된 모습의 노조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의 편의주의적 노조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사용자들은 無勞動無賃金이나 공정게임의 룰(rule)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앞서 먼저 긍정적노사관으로 구사대 폭력, 위장폐업, 전근대적 반상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노조측은 경영진이 말로는 노사대화 운운하면서도 고압적인 권위주의 자세로 임하여 비인간적 대우를 일삼았고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도 기업경영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쨌든 노조도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폭력보다는 서툴더라도 대화와 교섭에 의한 평화적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나 정부측은 외부세력과 연계된 노조활동이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위해 악용되는, 바람에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통일교계열기업인 창원의 주석회사 통일의 경우 노조측은 88년 3월 31일 임금교섭을 시작했으나 임금인상보다는 해결

노동자복지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회사측은 해고자 복직에는 부정적 태도를 취 하면서 이 회사 문성군사장등 임원들은 특히, 현재 분규를 야기하고 있는 일부 노조간부들의 뒤에는 해고근로자들이 있고 또 그 뒤에는 85년 노조위원장으로 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연류되어 나간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문성현이가 회사 전복의 목적으로 분규를 배후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解雇勤勞者들의 원상회복은 안된다고 주장하였다한다.⁶⁾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 의하면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조직이나 구성원의 의식과는 크게 다른 이념을 가진 새로운 노동운동이 태동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제한 다음 작년(87)과 금년(88)에 결성된 노조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서울 지역 민주노조협의회를 비롯한 지역별 민주노조협의회가 주도하는 신노동운동은 종교계, 재야 운동권의 지식 공급과 학습지원을 통해 이론을 풍부하게 하며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노동운동은 근로자계층이 사회적 改革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노동자의 지위향상에만 끝나지 않고 정치적 부조리, 사회 경제구조의 모순과 격차등에 대한 철저한 의식과 학습 과정을 통해 고착된 그들의 사고는 노동법은 물론 노동조직과 경영의 커다란 도전요인이 될 것 임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동운동에 유리한 법제정보다 혁신적 노동운동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경영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어쨌든, 7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화를 표방한 반정부운동이 사회운동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80년대에 들어와 급진파의 반체제운동을 내세우는 일부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60년대이후, 군사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민주화를 외면하고 반공주의를 내세워 남북대립을 격화시켰으며 성장제일주의의 노동집약적공업화에 의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각종 경제적 부조리를 만연시켰다. 이리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이에 환멸을 느낀 일부세력이 급진세력화 했으며 이러한 경향을 띤 사회운동이 일부세력에 의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살리는 길만이 급진 세력을 소수파로 만들고 참다운 민주노조운동을 키우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1988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

7)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 1988년 7월호 1면

Ⅳ . 勞 動 運 動 의 評 價 와 展 望

현재 한국 노동운동은 3·1 운동정신에 입각한 일제하 노조운동의 정통성 그리고 4.19 革命精神을 이어받은 노동자운동과 미군정하 및 정부수립후의 비정통성이나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산업화이후의 제도권의 노동조합운동의 두 큰조류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특히 70년대에 싹트기 시작하여 정통성을 이어받은 노동운동사의 뚜렷한 맥이 될 수 있는 존재이었지만 탄압을 받아 성장하는 노동세력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장노동자중심의 노동자 운동은 처음에 자연발생적 우발적이었던 것이 70년대말에서 80년대에 들어오며 따라 노동세력의 성장, 그리고 재야사회단체와의 제휴에 힘입어 점차 조직화 되면서, 在野勞動運動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가다가 6.29선언을 계기로 크게 부상되기 시작한 것이다. 후자는 정부나 기업이 선건설·후분배를 표방하는 공업화 지향적 조합주의를 노동자에게 종용하게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60년대 보다는 70년대, 70년대 보다는 80년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화되어가기만 했다. 그러다가 6.29선언을 계기로 정부의 비호가 느슨해지고 재야노조운동의 도전을 받게 됨에 따라 제도권의 노조운동은 표면상으로는 위세를 지키는 듯하나 내면적으로는 더욱 허약해지면서 하극상등 내부진통을 겪으면서 점차 내부정비가 이루어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내부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정치상의 여야갈등에 더하여 좌우갈등, 세대갈등이 야기되면서 재야운동세력의 일부가 革命的 組合主義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87년 노동쟁의는 낡은 노동운동을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정화시켜 나갈 전환점으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지만 다른 편으로 自省의 소리도 적지 않다. 87년 노동쟁의는 6월 민주화 투쟁과 6.29선언이란 우발적인 사태를 계기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전국적인 대중투쟁이지 어느 집단의 일괄된 계획하에 진행된 계획성있는 투쟁은 아니다.

87년 노동쟁의가 중화학공업부문의 대기업에서 남성 노동자들의 축적된 억압에 의해 주도되었고 시발되었으며 운수업노동자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임금인상등 노동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勞組民化化, 경영민주화등 민주화요구를 내세웠고 투쟁방법이 적극적이며 현대, 대우제철의 계열사간의 연대투쟁이 두드러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노동쟁의가 일어난 초기에는 국민여론이 어느 정도 호응했고 폭발적인 노동저항 앞에서 6.29선언으로 잠시나마 노동통제가 허슨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정부와 기업은 당황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오면서 정부와 기업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쟁의가 생산과 수출에 해로운뿐 아니라 쟁의자체가 외부불만세력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명분아래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강압적 진정으로 종말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노동세력의 역량부족과 민주화는 선언뿐이고 종전의 권위주의체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노동쟁의가 노동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의식을 높였으며 귀중한 경험의 축적과 새로운 노동운동이 발전될 토대를 결과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성격으로 해서 그 한계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 (1) 87년 노동쟁의가 우발적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통일적 일관성 있는 노동운동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 (2) 한사업장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쟁의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부의 부재, 경험 부족 내지 미숙, 분열등으로 운동의 방향과 행동통일을 잃어 파괴행위로 역선전 당할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87년도 노동쟁의가 하나의 크나큰 歷史的 事件으로 남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운동사적 측면에서 본 평가기준에 따른다면,

① 노동운동 본래의 목적인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그러기 위해 노조가 얼마나 효율화되고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대투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② 노동조합이 자주적 조직으로서 어느정도 組合民主化를 기하고 정부나 기업 기타 사회단체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③ 영속적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어느정도 후계자를 양성하면서 전문화되어 특수성과 전문성을 유지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식민통치, 미군정, 전시, 전후수습, 권위주의적 경제개발과 같은 정치발전에 좌우되어 노동조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세력이 양성화된 힘으로 크지 못하여 이상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와 기업의 성숙과 그리고 국민의 의식수준향상에 따른 민주화 요구가 6.29선언으로 표출되고 신단계의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점이 될 87년 노동쟁의를 경험한 오늘날 앞으로 노동운동은 이상의 평가기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노동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은 노동운동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저변노동세력이 양적으로 커질 뿐 아니라 젊은 층의 제조공업노동자의 비중이 커졌고 그들의 平等意識, 權利意識이 높아져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의 성숙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환경 즉, 노동운동의 객관적 조건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치사회체제가 점차 민주화되지 않을 수 없고 한국경제가 노동집약적 공업화에서 자본·기술집약적 공업화로 전환하면서 고임금시대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여론이 노동운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국제여론이

경쟁상대로 여기는 한국의 노동운동역제를 소시얼덤핑의 구실로 삼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등이다. 어쨌든 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 가는 가운데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생산의 저해요인이 되는 노사분규를 해소하여 경제적 진보를 약속하는 발전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경제발전, 사회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단계의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진로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살펴 본다면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의 지위향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민주화와 바람직한 社會建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 운동의 방향설정을 위한 理念定立이 필요하고 나아가 리더십 확립으로 조합원을 대변하는, 조합원이 믿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사상적 방향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반공적·실리적조합주의(노총), 공업화지향적 조합주의(정부, 기업), 정치적 조합주의(재야), 혁명적 조합주의(급진세력)등인데 이 중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적 조합주의를 살려 노동운동을 건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조합주의는 노동조건과 생활의 유지향상을 중심과제로 하면서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도모하고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단체협약과 노사협의제나 경영참여를 중요시하고 나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국민적 시야에서 社會改革運動을 촉진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조로 한 정치활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운동을 이끌고 갈 지도자의 자질을 높여야 노동운동이 정상화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고위 지도자들은 노동운동을 주도권 싸움으로 몰고 갔고 나아가 政界 進出의 발판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

(2) 노동운동계가 저변 노동세력의 성장을 중심으로 건전하게 개편되어 조합민주화와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야 노동세력은 신규 노조를 민주노조로 키우면서 명실상부한 노조 연맹체를 구성하여 노동운동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제도권의 노동 조합은 낡은 인습을 타파하면서 철저한 내부 정비를 통하여 조합조직을 쇠신하면서 산별 연맹체나 노총을 건전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두층기의 노동조합이 건전화 되면서 경쟁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노동운동이 건전화될 것이고 나아가 앞으로 노선이 같다면 조직통일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노동조직을 강화 확대하고 그 위에서 노동자의 무관심을 일소하고 합심을 이끌어내는 교육선전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3) 노동운동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노동운동의 목적인 노동자의 지위향상에 전념할때

노동운동의 大道가 열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운동이 항상 외풍에 시달려 보잘 것 없는 일부사회단체의 입김에 놀아나 체면을 잃게 된다.

노동운동이 확고한 신념과 주체성을 세우고 그 바탕위에서 노동운동의 목적에 철저히 할 때 노동운동은 비로소 獨自性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노동조합에서 영국노동당이 탄생했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노동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가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제휴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초기에는 당과 조합이 일체가 되었지만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당과 조합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노동쟁의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 오늘의 노동자의 요구가 내일의 사회를 만들어 온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노동운동은 사회개혁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동운동은 조합민주주의로부터 출발하여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뜻하는 산업민주주의로 발전하고 나아가 정치민주화없이 산업민주화가 불가능하므로 정치민주화에도 무관심할 수 없다. 나아가 국제간의 불균등에서 오는 노동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다.

(5) 노동운동은 産業社會의 未來像. 국제사회의 미래상에 대응하여 자기위상을 바꾸어 나가면서 새로워지는 것으로써 발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공업화에 의한 고도성장으로 경제규모는 확대됐으나 그 한계성이 노골화되자 안정성장, 산업고도화에 의한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단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우기, 고도성장, 고물가, 국제수지적자의 경제가 안정기조, 산업고도화, 국제수지흑자의 경제로 바뀌어 가면서 흑자관리를 위한 국제화대책, 산업구조 조정, 격차시정을 위한 복지정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임금시대로 바뀌면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더우기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 특히 대공산권수출이나 남북긴장완화가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세분석을 통해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노동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노동운동은 운동노선의 혼란을 가져오기 쉬운 재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